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74호
2018. 9. 3

정책동향

- 8·27대책... 공공 택지 추가 확보 및 국지적 규제 확대
- 건설산업의 인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시장동향

- 8월 CBSI, 전월 대비 14.6p 하락한 67.3

산업정보

- DBOM 발주 방식의 장점과 국내 적용 가능성
- 「ENR」 지 250대 건설기업 매출 동향 분석

건설논단

-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판' 키워야

알림

- 국제 컨퍼런스 개최,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2018년 9월 11일 14:00, 국회 의원회관)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팝업창 바로가기 or 연구원 발간물 → 기타 발간물에서 다운로드 가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8·27대책... 공공 택지 추가 확보 및 국지적 규제 확대

- 대책 발표 이후 금융 규제 강화, 세제 개편 논의로 확대 중 -

■ 정부, 공급 확대를 포함하는 8·27대책 발표

- 정부는 8월 27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국지적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발표함.
- 지난 8·2대책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책 중심이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3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내 공공 택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밝힘.
 - 2017년 말 기준, 정부는 수도권 미매각·미착공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약 48만호의 공공 택지를 보유하고 있음. 게다가 기 발표된 성남 북정, 성남 서현,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 2지구 등 14개 서울 인접 신규 공공 주택지구에서 6만 2,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추가로 확보함.
 - 이번 대책에서는 3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가능한 30여 개 공공 택지의 추가 개발 계획을 밝힘.

■ 서울 및 인접 경기도를 중심으로 국지적 규제 확대

- 서울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경기도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을 추가함.
 -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세종시에 이어 4개구(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신규 지정함.
 -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의 서울 전체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 이어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를 추가 지정함.
 - 조정대상지역은 기 지정된 서울 전체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 신도시, 부산(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에 이어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일광면을 제외한 부산시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함.
 - 선정된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금융 규제(LTV·DTI 적용 강화, 주택담보 대출 및 중도금 대출 요건 강화, 기업자금 대출 제한, 중도금 대출 요건 강화), 정비사업 규제(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 강화(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재당첨 제한 등) 및 전매 제한(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세제 규제(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을 적용받게 됨.

8·27대책 이후...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에는 시장이 단기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시차를 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이 반복됨. 서울 아파트시장의 추이적 안정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저금리 상황에서의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 쏠림, 서울시의 개발 계획 언급, 중산층으로 변진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대됨.
- 국지적 규제에 따른 서울 아파트시장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시그널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인 8월 26일, 서울시가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 보류를 발표함.
 - 8·27대책은 시장의 예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음. 그래서 서울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부동산 대책과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

(단위 : %)



주 : 전월 대비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임 ; 자료 : 부동산114㈜

- 대책 이후 금융 규제 강화, 세제 개편 논의가 확대되고 있어 8·27대책만으로 정책 효과를 예단하기 어려우며, 중·장기적 정책 효과 분석과 운영 방안 모색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시중은행 DSR 전면 시행(10월), 우회 대출(임대사업자, 전세 대출) 점검 강화, 전세 대출 총량 관리, 다주택자·고소득자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등 8·27대책 이후 금융 규제 강화 논의가 현실화되고 있음.
 - 8월 29일자로 과열지구 내 주택 편법 증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보유세 강화 논의가 다시 확대되고 있음.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건설산업의 인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위해 인재 확보 필요 -

■ 건설산업의 인재 부족

- 세계경제포럼(WEF)과 보스턴 컨설팅은 최근 ‘산업 인재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계획’ 보고서¹⁾에서 건설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한 12가지 방안을 제시함.
- 건설산업은 혁신이 더디며 산업의 이미지 하락, 보수적인 업무 문화, 산업의 표준화 미흡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 많은 산업에서 신기술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발전이 진행된 것과 달리, 건설산업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지체되고 생산 방식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 이에 현장 근로자는 더럽고 위험한 일자리, 사무직 근로자는 혁신과 도전이 없는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함.
- 또한, 세계경제포럼은 건설산업에서 인력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60세 이상의 인력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30세 미만 인력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유사한 상황임. 건설 기술인력 등록자 중 29세 이하인 청년 기술인력의 비율은 2005년 18.4%에서 2014년 3.4%로 감소했음.²⁾ 청년층의 비율은 10년 동안 무려 15%나 감소했으며, 이러한 추이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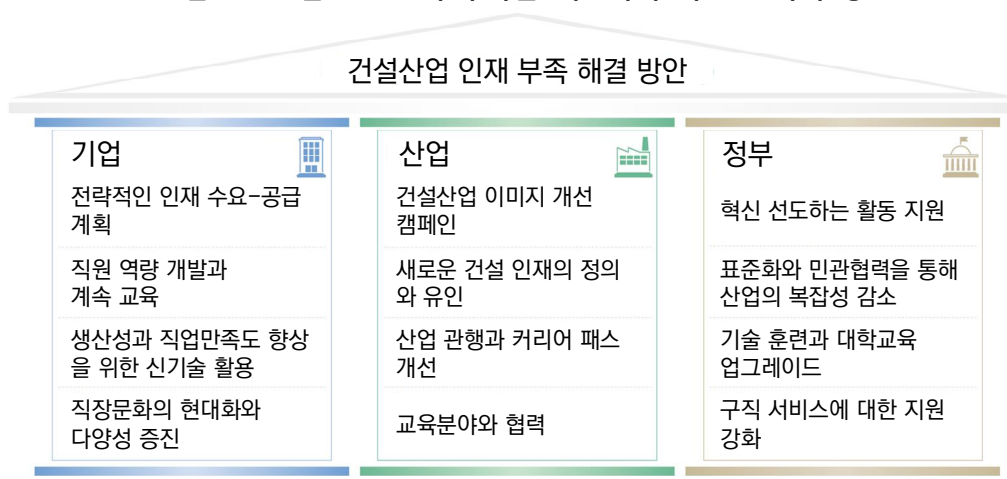
■ 기업, 산업, 정부의 인재 부족 해결 방안

- 세계경제포럼은 인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업, 산업, 정부 차원으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인재 부족은 산업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기업, 산업, 정부는 타 부문과 서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함. 예를 들어 정부는 기업이 신기술 채택과 인재 고용이 쉬워지도록 기존 규정을 수정하고, 기업은 정부가 혁신과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1) World Economic Forum(2018. 2), An Action Plan to solve the Industry's Talent Gap. 이 보고서는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산업(The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industry)이란 용어를 사용함. 이 산업은 공항,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와 병원, 학교, 법원 등 사회 인프라, 그리고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등을 건설하는 산업으로 본고에서는 건설산업으로 보았음.
 2) 박환표 외(2017), 「건설기술자의 취업통계분석 및 취업률 제고 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8권 제3호.
 3) 표본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김민형(2018)의 연구에서는 30세 이하의 건설기술자가 2011년 9.2%에서 2016년 10월 시점 3.9%로 감소하여 2014년 이후로도 청년층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됨. 김민형(2018), 「건설기술자 수급 실태 및 수급 영향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제시된 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새로운 인재의 유입을 위해 건설산업의 매력을 높이는 방안과 기존 인재의 교육 및 지원 체계 업그레이드 방안들로 구분됨.
- 그 밖에 기업, 산업, 정부 차원의 역할과 특징에 맞는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음.
 - 기업은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직원의 현재 역할, 미래 필요 기술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략적인 인력의 수요·공급 계획을 세워야 함.
 - 산업 차원에서는 인재에 대한 건설산업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재 풀을 구성하고, 특히 디지털 기술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게임산업의 디지털 기술은 BIM, 가상 및 증강 현실과 같은 건설 애플리케이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 사업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이것이 산업 전체로 혁신이 확산되도록 해야 함. 그리고 건설산업 규정의 표준화와 간소화를 통해 인력이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불필요한 업무가 아닌 기술 기반의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마련해야 함.
- 한편, 인재 문제는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 예를 들어 신흥국의 경우 비숙련공의 기술 습득이 중요하며, 선진국은 디지털 기술 인재 유치나 고령 인력의 퇴직 이후 나타날 세대 간 기술 단절 문제 등의 해결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사업에서 인재 부족을 겪고 있지만, 내수 시장에서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 문제가 더 큼. 따라서 임금과 근무 환경 개선, 직무 만족 등 건설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그림 1> 건설산업 인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12가지 방안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18. 2), An Action Plan to solve the Industry/s Talent Gap.

성유경(부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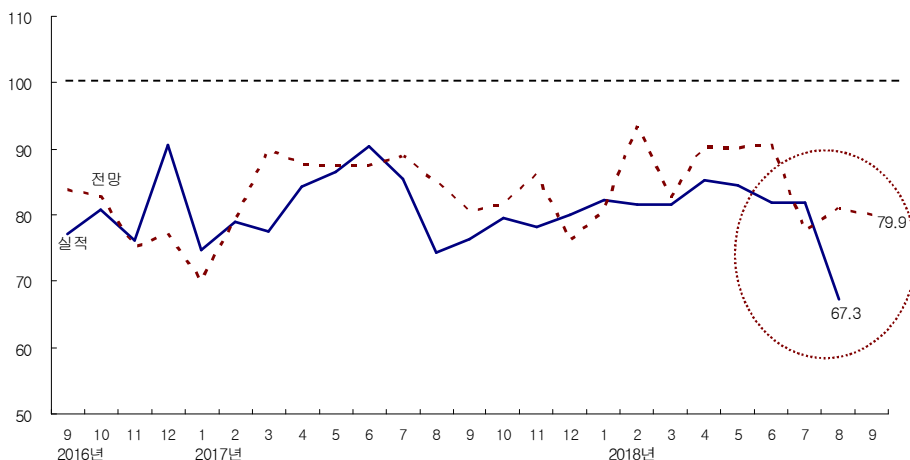
8월 CBSI, 전월 대비 14.6p 하락한 67.3

- 부동산 규제 강화 및 SOC 예산 감축안 발표 영향, 건설경기 부정적 인식 확대 -

■ 2018년 8월 CBSI 67.3 기록,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

- 2018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4.6p 하락한 67.3을 기록함(<그림 1> 참조).
 - CBSI는 보유세 인상 소식 및 향후 부동산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난 4월부터 점차 둔화되었음. 그러다가 8월에 전월 대비 14.6p 급감한 67.3을 기록함으로써 2014년 1월의 64.3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함.
 - 통상 8월 흑서기에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지수가 전월 대비 5~9p 정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5p 가까이 하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 특히, 전월 대비 14.6p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월(-16.5p) 이후 두 번째로 큰 낙폭이고, 2017년 1월(-15.9p) 이후로는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기록임.
 - 결국, 건설기업들의 심리가 경기 침체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수주와 진행 중인 공사 물량이 모두 전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서울 및 수도권 투기지역 규제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과 올해보다 5,000억원 삭감된 2019년 SOC 예산안 발표의 영향으로 건설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업 규모별로 모든 기업 지수 10p 이상 하락, 대형기업 지수 하락 두드러져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기업의 지수가 10p 이상 하락한 가운데 특히, 대형기업의 지수가 20p 가까이 떨어졌음(<표 1> 참조).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8.2p 하락한 81.8을 기록함.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5.0p 하락한 67.5를 기록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0.0p 하락한 50.0을 기록함.
- 지역별로 서울기업 지수는 70선으로 후퇴하고, 지방기업 지수는 60선 아래로 급락함.
 - 서울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4.3p 하락한 77.9을 기록함.
 - 지방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27.4p 급락한 55.5를 기록함.

<표 1> 기업 규모별, 지역별 CBSI 추이

구분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79.5	78.2	80.1	82.3	81.5	81.6	85.2	84.5	81.9	81.9	67.3	81.1	79.9	
규모별	대형	92.3	85.7	92.9	100.0	91.7	92.3	100.0	100.0	83.3	100.0	81.8	91.7	90.9
	중견	75.9	81.8	66.7	77.8	89.7	89.7	82.1	82.1	78.0	82.5	67.5	80.0	72.5
	중소	68.8	65.3	80.4	66.7	60.3	59.6	71.4	69.0	84.5	60.0	50.0	70.0	75.4
지역별	서울	85.2	84.3	82.1	90.6	93.6	93.5	94.7	92.4	81.0	92.2	77.9	85.9	85.7
	지방	71.3	69.9	77.2	73.0	67.0	66.7	73.9	75.3	82.8	82.9	55.5	79.9	73.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8년 9월 전망치, 8월 실적치 대비 12.6p 상승한 79.9

- 2018년 9월 전망치는 8월 실적치 대비 12.6p 상승한 79.9를 기록함.
 - 9월에는 흑서기 이후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반적으로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계절적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비록 8월보다 지수가 개선되지만, 80선에 미치지 못하여 9월에도 부정적으로 경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박철한(부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DBOM 발주 방식의 장점과 국내 적용 가능성

-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단일 주체 담당, 공공 시설관리 지자체 사업에 적용 가능 -

■ DBOM(Design Build Operate Maintain)은 설계시공 일괄(Design Build) 계약자가 당해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책임을 지는 통합형 조달 방식임.⁴⁾

- 실제로 이 방식에서 민간 사업자의 계약 범위는 종래의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함. 하지만 사업을 위한 자원 조달을 공공부문이 담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해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미(美) 연방고속도로청은 이 방식을 턴키 혹은 BOT 등 다른 명칭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함.
- DBOM의 여러 장점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계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다른 주체에 의해 수행하던 영역을 단일 계약 주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음.
 - 시공 단계 혹은 유지관리에 활용되어야 할 장비 혹은 자재 등을 반영한 설계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험과 지식이 유지관리까지 연계되어 시설 및 운영 단계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함.
 - 계약자가 설계 및 건설 공사비 등의 초기 비용(Initial Cost)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과 이에 따른 운영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음.
 - 특히, 공공시설에서 쉽지 않은 생애주기비용 관점의 접근으로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음.⁵⁾
 - DBOM은 미국 공공부문에서 장기적인 관리와 안전이 요구되는 터널과 교량 사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거론됨.
- DBOM 역시 기타 조달 방식과 마찬가지로 기술과 가격 경쟁을 통해 이루어짐. 다만, 과업과 가격의 범위에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가 포함되는 것임.
 - 이 방식은 계약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공 발주자는 계약자 선정 및 각종 요구 사항 정립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발주자가 설계시공 분리 방식에서 가졌던 사업 단계별 통제권을 본 방식에서는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임.

4) www.fhwa.dot.gov (미 연방고속도로청)

5) 종래의 공공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의 경우 생애주기비용 관점의 접근이 어려워 계획적인 예산 집행보다는 당장 필요한 것, 시급성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온 한계가 있음.

■ 미국에서 DBOM은 IPD와 함께 유력한 대안적 발주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음.

- 건설업계는 DBOM이 프로젝트 비용 저감과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활용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⁶⁾
- McGraw-Hill(2014)의 설문에 따르면 설계자는 DBOM의 프로젝트 비용 저감과 운영 유지비용의 고려 등을 가장 높은 장점으로 인식하였음. 반면에, 시공자는 프로젝트 리스크와 책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음.

■ 미국에서 최초의 공공 건축 DBOM 사업은 캘리포니아주 법원⁷⁾ 건설공사로, 민간 계약자와 35년 간의 실시협약을 체결함.

- 상기 사업에서는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방식도 접목되었고, 사전 제작 및 모듈러 방식으로 시설을 건설하였음.
 - 특히 DBOM 방식이 가지는 장점 그대로, 초기 건설비용보다 생애주기비용의 절감이 강하게 유도되었고, 유지관리에 효과적인 각종 자재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 인프라 부문의 경우, 뉴저지주의 Hudson-Bergen 경전철 사업,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 모노레일 사업 등이 있음.

■ 국내에서 DBOM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공공 시설관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 사업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관리 대상 노후 시설의 개량 사업과 운영·유지관리를 패키지로 한 발주 방식은 민간의 전문성 도입과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됨.
 - 단일 노후 인프라 개량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중·소형 개별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묶어 DBOM으로 발주하는 전략도 필요
- DBOM 방식은 운영·유지 단계의 주체가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기 때문에 첨단 기술의 적용이 용이함. 또한,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 설계와 시공 과정의 각종 혁신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erik.re.kr)

6) Project Delivery Systems, SmartmarketReport, McGraw Hill Construction, 2014.

7) 명칭은 Governor George Deukmejian Courthouse로 2010년 10월에 실시협약을 맺었으며, 2013년에 준공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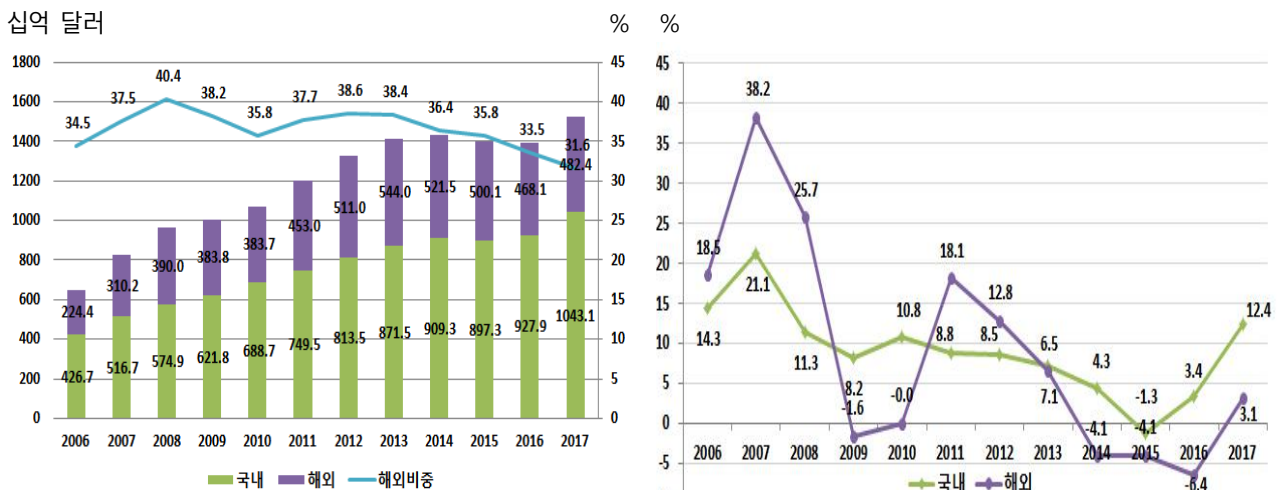
『ENR』지 250대 건설기업 매출 동향 분석

- 해외 매출 반등 속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 하락은 가속화 -

■ 250대 건설기업의 2017년 해외 매출 규모는 4,8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⁸⁾

- 2017년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143억 달러 증가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지속된 감소세가 반등함.
 - 하지만 상승세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연간 해외 매출은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5,000억 달러를 넘지 못했음. 또한 해외와 국내를 합친 글로벌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1.6%로 전년 대비 1.9% 감소해 2002년(31.3%)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250대 건설기업의 글로벌 매출은 1조 5,2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52억 달러 증가했음. 이는 전년 대비 12.4%(1조 431억 달러)나 증가한 국내 매출의 급성장 때문임.

<그림 1> 글로벌 건설시장 매출(좌)과 국내·해외 매출 성장률(우) 추이



자료 : ENR

■ 공종별로는 건축과 발전 부문, 지역별로는 미국과 아시아 및 유럽의 해외 매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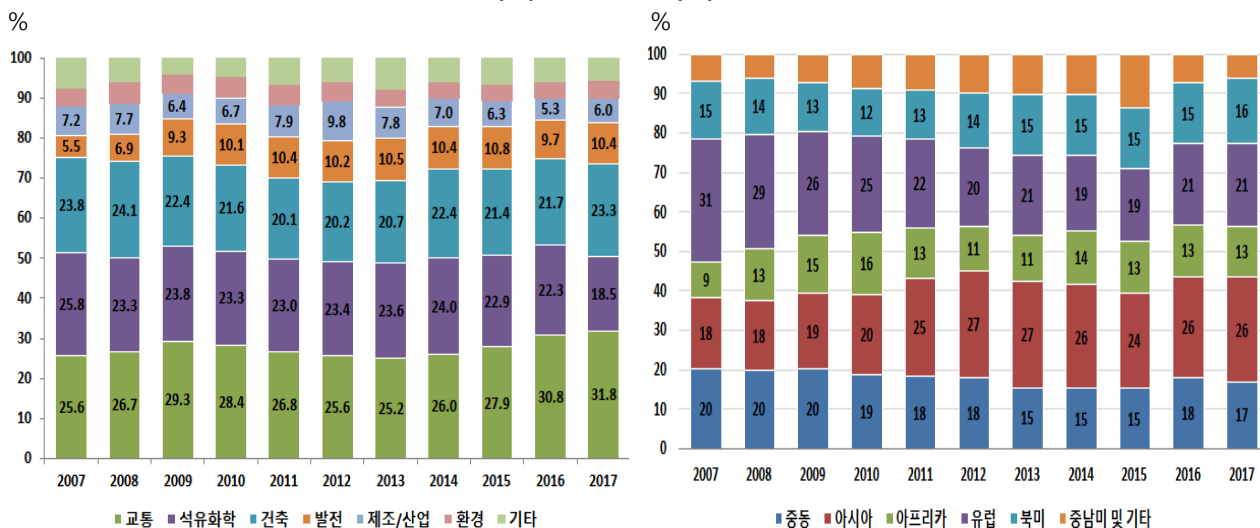
- 건축부문의 해외 매출 규모는 1,1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으며 발전부문도 전년 보다 9.1% 증가한 501억 달러를 기록함.
 - 이 외에도 교통(1,534억 달러, 5.9%↑), 제조 및 산업(290억 달러, 14.5%↑), 환경(204억 달

8) 2018년 8월 24일 발표된 ENR The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보고서를 분석 및 요약함.

러, 4.5%↑) 부문도 증가세로 전환함. 반면에 석유화학부문은 2016년 1,045억 달러에서 17.3%나 감소하며 891억 달러에 그치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하회함.

- 지역별로는 미국 시장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한 601억 달러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 미국과 더불어 아시아와 유럽 시장도 전년 대비 각각 6.1%와 6.4% 증가한 1,276억 달러와 1,023억 달러를 기록함.
 - 반면에 아시아와 유럽에 이은 3대 시장인 중동 지역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814억 달러에 그쳤으며, 중남미 시장 또한 전년 대비 12.1%나 감소함.

<그림 2> 공종별(좌) 및 지역별(우) 해외 매출 비중 추이



자료 : ENR

우리 기업(11개사)의 해외 매출은 257억 달러, 점유율은 5.3%로 전년 대비 모두 하락

- 2015년 405억 달러(8.3%)였던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매출은 2016년(339억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대폭 감소함.
 - 국가별 점유율 순위를 보면 중국(23.7%), 스페인(13.9%), 프랑스(7.6%), 미국(6.9%), 독일(6.3%), 한국·일본(5.3%), 터키(4.8%), 영국(4.6%) 순임.
 - 한국은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1,1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억 달러 증가했으며 스페인도 전년 대비 81억 달러 증가해 점유율은 전년 대비 1.3% 상승함.
 -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매출 감소는 중동 시장의 위축과 최근 이어져 오고 있는 해외 수주 부진 등에 따른 것임. 전년 대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없이는 매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판’ 키워야

지난 8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 확대’를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 빠르게 ‘10대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를 혁신성장 회의 안건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지역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의 의지만큼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지역의 생활형 SOC 부족 문제는 지역의 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부산발전 2030’, ‘대전그랜드플랜 2030’, ‘강원비전 2040’ 등 지역마다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 전략들은 한결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제1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 발전 전략들은 실행력이나 성과가 크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의 부족이었다. 또한, 지역 간의 불균형한 인프라 공급 수준, 그리고 한 지역 안에서도 드러나는 도시와 농어촌 간,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생활 인프라 격차는 지역민 간의 갈등을 유발했다. 더 나아가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크게 저해해 왔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지역이 안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받아들이고 지역 내, 지역 간 생활 인프라 공급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투자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 만큼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가 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의 목표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지역이 안고 있는 인프라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의 이면에는 도로·항만 등 토목 투자를 기피하는 부정적 시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서는 지역 내, 지역 간 원활한 이동과 지역 문화, 관광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및 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가 정부가 말하는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보다 더 크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전은 현재 대도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도로가 없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면 도심 내 차량 속도가 시속 20km에도 못 미쳐 그야말로 출·퇴근 대란을 겪는다. 제주는 공항시설 부족으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연이어 표출되고 있다. 국토의 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에도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저속에 단선인 보령선이 유일한 충남, 30여 년 간 신항만 건설 등 지역 숙원 사업인 새만금 개발이 담보 상태에 있는 전북 등, 이들 지역 모두 핵심적인 도로·철도·항만 등의 교통·물류 사업 및 국책 개발 사업들이 지지부진해 지역 발전에 크게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인프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우리 경제의 미래 준비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인프라 투자를 유지해 나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된다. <브릿지경제, 2018. 8.24>

김영덕(연구위원·ydkim@cerik.re.kr)



국제 컨퍼런스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National Infrastructure Investment Strateg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18년 9월11일(화) 14시~18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시간	주제	내용	연사
13:00-14:00		접수	
14:00-14:10		환영사	박순자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4:10-14:20		개회사	유주현 회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4:20-14:30		축사	김현미 장관 (국토교통부)
14:30-14:40		기념촬영	내외빈
14:40-15:20	1주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진국 인프라 투자 전략과 동향	버나드 뮐러 (Bernhard Müller) UNECE PPP 분과 공동의장 (전 독일 재무부 차관)
	2주제	싱가포르 인프라 투자 및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	앙 리안액 (Ang LianAik) 싱가포르 건설사업청(BCA) 국장
	토론	좌장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전 국토해양부 차관) 패널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16:20-16:40		휴식(Coffee Break)	
16:40-17:05	1주제	글로벌 시장의 스마트시티 동향	마크 라스본 (Mark Rathbone) PwC 파트너
17:05-17:30	2주제	선진국 인프라 투자 동향과 전망	리처드 마셜 (Richard Marshall) FitchSolutions 인프라 부문장
	토론	좌장 (김경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패널 (이상기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 /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7:30-18:00			

참가 접수 안내

- 참가비 : 무료
- 사전접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서 사전 참가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주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관 FCA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Construction Associations

후원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리서치 데인건축학회